



# 전자정부 구축 '넘어야 할 산 많다'

전자정부 그랜드 컨퍼런스 '성료' ...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700여명 참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KDPO)와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전자정부 그랜드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KAIST 전자정부연구센터, 한국행정학회 전자정부연구회 등이 후원한 이번 '전자정부 그랜드 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박준우 전무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돼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년도 부처별 정보화 계획과 서비스 통합방안, 성공 사례들이 집중 소개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고 함께 진행된 전시회에서도 전자정부와 관련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선보여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은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아직 과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신종훈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정부 관련 이벤트인 '전자정부 그랜드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각 정부부처 정보화담당관과 기업체 전자정부 관련 담당자,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내년도 부처별 정보화 계획과 부처간 전자정부서비스 통합 방안, XML·모바일·KMS·CRM·보안 등 10여가지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또 부대행사로 마련된 전시회에서는 쌍용정보통신·인컴아이엔씨·씨오텍·유진데이터·유비즈시스템 등 주요 정보화 업체가 전자정부 관련 첨단 솔루션들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어도비시스템즈가 선보인 PDF 자동변환 솔루션

선과 슈퍼컴퓨팅 및 클러스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노후된 PC를 재활용할 수 있는 클루닉스의 '만파식적(Encluster TSP)' 솔루션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했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박민식 팀장은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워낙 관심이 높아 컨퍼런스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악천후와 수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부처별 정보화 계획 '관심 집중'

이번 행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주제는 역시 정통부의 내년도 정보화추진시행 계획이었다.

정보통신부의 나승식 서기관은 첫날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부처별 '2003년도 정보화추진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나승식 서기관은 "그간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며 "이는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협력해 종합적·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 "제3차 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추진 목표는 모든 국민의 정보활용능력을 극대화하고 전 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정보화로 투명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스마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제까지의 정보화가 양적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 정보화의 정책기조는 질적 심화와 신산업을 위한 토양 조성이라는 측면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 서기관은 또 "내년도 정보화추진 예산의 경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생산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올해보다 약 1조 2000억원(66.7%)이 늘어난 총 4조 2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전자정부 추진 ... 아직은 초보 수준

첫날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KAIST의 황보열 교수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영정보시스템(MIS)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비해 전자정부 추진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밝혀 참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황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국제기술대회에서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나 전자정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제적으로는 OECD와 UN이 분야별 정보정책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11대 핵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사전 연구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또 "정책결정, 거래처리, 지식베이스, 기술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도출하고 전문화된 전자정부 연구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와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따른 과세를 위한 기술적 해결은 물론이고 정책결정과 정책지식관리시스템(PKMS)간 연계, 의견수렴형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 인터페이스 강화, XML 표준화 작업,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한 CRM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상위 수준 국가 ITA 개발 필요

투이컨설팅의 김인현 사장은 국가 전체적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활용을 위해서는 상위 수준에서의 '국가 ITA'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날 세 번째 강사로 나선 그는 "최근 IT부서들을 살펴보면 비즈니스의 복잡성 증가로 정보시스템의 복잡성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어 현재 기술과 과거 기술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 때문에 90년대 후반들어 정보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최적화가 시도되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ITA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국가 전체적인 ITA 활용을 위해서는 상위 수준에서의 국가 ITA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주민·부동산·자동차·세금·기업·수자원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대상과 전자인증·전자문서표준·전자지불 등 정보기술 표준 대상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국가 ITA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요건을 반영한 부처별 ITA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강연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XML 기술현황 및 활용 전략'에서는 배제대 정회경 교수가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전자정부에 XML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XML에 대한 이해와 XML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표준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XML에 대한 교육 강화와 XML에 기반한 정부 전자문서 표준화 및 정보유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호운용성 확보 필수

이번 행사에서는 첫째 날 주로 전자정부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 둘째 날 이어진 강연에서는 현 단계에서의 추진방안과 정보화 담당관들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둘째 날 첫 번째 강연에서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류광택 부장이 '부처간 전자정부 서비스 통하이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류 부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민 서비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사업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상호운용성을 위해서는 시스템간 표준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준수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정보 연계나 공동활용을 위한 불필요한 변환과정 없어지고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개편시 불필요한 의사 결정 시간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전자정부 상호운용성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운용성팀은 기술 및 표준 발전추세를 고려,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 공통표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전체 조직 정보호를 실시간화 해야

이어진 '디지털 시대의 전자정부 정보화 담당관의 역할 및 과제'에서는 KAIST의 전자정부연구센터 김성희 교수가 연사로 나와 "진정한 의미의 e-정부는 현재의 e-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교수는 "전자정부는 정부운영 방식의 혁신을 의미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방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조직 형태의 변화 추세와 수렴화의 역방향을 주시하고 네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소요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시행계획 소요재원(A)	2002년 예산	2003년 시행계획 소요재원(B)	증가율(%) (B-A)/A
국고	16,867	17,227	27,019	60.2
지방비	6,782	10,457	12,495	84.2
민자	507	665	762	50.3
계	24,156	28,349	40,276	66.7

(2002. 5월 19차 실무위)

트위크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재조명해야 하며 특히 기존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전체 조직의 정보흐름을 실시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운대의 최영훈 교수는 '지능형 전자정부의 개념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지능형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질 높은 의사결정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정부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소수의 고위직, 또는 정부만의 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지능, 그리고 사회에 편재된 지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능형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고 개인·부서·부처·부문별 자유재량을 보장하면서도 종합적인 시스템 사고가 가능해진다"며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은 단순히 'e-정부 → m-정부 → u-정부'로 발전하는 전이적인 차원을 넘어 상당 부분 인간적인 측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첨단 솔루션 경연장 마련돼

이번 전자정부 그랜드 컨퍼런스가 이처럼 성황리에 치러진 데는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함께 개최돼 관련 업계의 첨단 솔루션들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도 한몫을 담당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는 쌍용정보통신, 인컴아이엔씨, 유진데이터 등 총 12개 업체로 이들은 전자정부 관련 첨단 솔루션들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어도비시스템즈의 PDF 솔루션은 모든 문서 변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첨단 솔루션으로 작업자는 단지 자신이 작업한 한글문서를 어도비 PDF 변환서버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서버로 전송된 문서는 어도비 PDF 문서로 자동 변환되고 필터로 텍스트를 추출해 검색엔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 분류한 후 웹으로 보내진다. 특히 회의록의 경우 어도비 PDF와 XML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태그드 PDF 문서로 구축됐다. 태그드 PDF는 회의록시스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 이것은 어도비 PDF 파일 변환시 발문자와 안건, 그리고 발문 내용 등에 태그가 자동 삽입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안건과 발문자, 발문내용 등의 분류가 이뤄지며 모든 내용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다. 한글문서와 이미지를 위해 서너 차례의 뷰어 설치를 해야 하는 복잡함 대신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만 설치하면 쉽게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한국지식웨어가 선보인 '엑스미스'는 기업내 다국어 문서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다국어문서관리솔루션(GDMS:Global Document Management System)이다.

다국어문서관리솔루션 엑스미스는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정보나 지식을 XML화한 후 이를 다국어로 자동 번역해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솔루션으로 다양한 포맷으로 작성된 기업문서의 통합 검색 및 관리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다국어 문서의 버전관리 등을 통해 기업환경의 국제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업내 다국어 문서 관리 업무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솔루션이다.

이외에도 메타빌드가 선보인 XML 서버엔진 '비즈스토어XML'과 한디소프트의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솔루션인 '비즈플로 워크플로' 등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쌍용정보통신이 선보인 유무선 통합환경의 그룹웨어 솔루션 '엔라이즈엠피스'도 관계자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한 자리에서 수십명의 예비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돼 전자정부 구축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전자정부 추진 과정

-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 1997년 2월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 1997년 6월 정부고속망 개통
- 1998년 3월 행정정보 공공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1998년 9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 1999년 9월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수립
- 2000년 9월 전자정부법 정부안 마련
- 2001년 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
- 2001년 2월 전자정부법 제정
- 2001년 5월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 선정(대통령 주재 보고)
- 2002년 4월 전자정부 추진현황 점검(제6차 전자정부특별회의)
- 2002년 10월 1단계 전자정부사업 완료(예정)